

# 일본 노동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이 홍 무

(상학박사, 일본와세다대학 상학부 조교수)

## 목 차

I. 문제의 소재

II. 적용의 전개

III. 적용 및 가입

IV. 특별가입

V. 시사점

## I.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일부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된다. 적용제외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②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주택사업자,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가사서비스업, ⑤제①호 내지 제④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⑤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며, 이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또,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4).

이상과 같은 한국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선진각국의 노재보험법 적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sup>1)</sup>

### 1. 미국

각 주별로 노재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이 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민간과 공적기구 거의 모든 사용자가 적용된다. 단, 종업원 수 3인에서 5인 미만을 제외하는 주가 있다.<sup>2)</sup> 자영업자 등은 임의로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강제가입은 아니다. 또, 연방공무원, 선원, 해양항만관계종사자 등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보상되므로 노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택근무자는 연방노동성의 견해로는 노재보상제도에서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2. 영국

영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는 소득보장제도를 의미하며, 의료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행해진다. 따라서, 업무재해를 당한 피용자에 대한 치료 또는 리허빌리테이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노재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국민보건서비스로 행해진다. 또, 사회보장에는 국민보험과 공적부조가 있으며, 국민보험에 관해서는 16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연령(남65세, 여60세)인 영국거주자가 보험료납부의

---

1) 日本労働研究機構의 자료에 의함.

2) 3인 미만을 제외하는 주가 7주, 4인 미만을 제외하는 주가 3주, 5인 미만을 제외하는 주가 4주가 있다(日本労働研究機構).

무를 진다.

국민보험의 보험료 각출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자격별로 제1종에서 제4종(class1 ~ class4)이 있다. 제1종보험료는 피용자에게 가해지는 보험료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제1종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국민보험의 모든 보험급부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퇴직급부, 구직자수당, 노동불능급부(incapacity benefit), 노재보험급부 등이다. 제2종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보험료이고, 제3종의 보험료는 임의의 보험료, 제4종의 보험료는 고소득자영업자의 보험료이다.

노재보상의 적용대상은 제1종보험료를 납부하는 피용자(employed earner)이다. 그러나, 노재보상급부(industrial injuries benefit)의 지급대상은 반드시 제1종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sup>3)</sup> 피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 이후<sup>4)</sup>부터는 내국세입청의 감독관(Commissioners of Inland Revenue)이 결정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①도제(徒弟), 소방대원, 구조원, 특별순사, 광산사찰관, 개인택시의 운전자, ②외국에서 고용되고 있거나 제1종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 또는 보란티어 개발원조자로 제2종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노재보상급부의 대상이 된다. 실업자대책(New Deal) 등 교육고용성이 제공하는 훈련제도 또는 고용서비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에 유사한 제도의 적용이 있다.

### 3. 독일

노재보험은 1997년부터 시행된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제7편의 노재보험에 의해서 규제된다. 피보험자는 강제피보험자(동법제2조), 보험자의 정관에 의한 피보험자(동법제3조), 임의피보험자(동법제6조)가 있다. 취업자는 물론이고 농업의 사업주, 어부, 학생, 도우미, 개호자, 장애인 등이 강제피보험자가 된다. 또, 사업주 및 방문자 등을 피보험자로 할 것인가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사업주나 이와 유사하게 독립해서 취업하는 자는 서면으로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종사자는 일반의 노재보험과는 별도의 농업노재보험제도가 있다.

### 4. 프랑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부문이 각기 강제가입이고 국외의 프랑스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는 상공업부문이 임의가입이고, 농업부문은 강제가입이며 임의계약으로 보상금액을 추가할 수도 있다. 농업자영업자는 농업사회공제제도에 의한 것으로 사생활의 사고를 포함한다.

노동자는 노동재해의 정의에 의해서 종속관계가 필요하고, 보수가 지불되는 것이 조건이다. 따라서, 무상의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속성이 불명확한 가내노동자, 상시보수를 받고 어린이를 보육하는 자, 인가를 받고 자택에서 고령자나 성인의 장애자를 유상으로 개호하는 자 등은 노재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세법상 공익성이 인

---

3) 소득이 낮아 국민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노재보상급부의 수급자격이 있다.

4) 이전에는 사회보장대신이 규칙에 의해 지정하고 있었다.

정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도우미에 대해서는 당해시설·기관이 임의 가입한다.

## 5. 이탈리아

법률에서 특히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작업만이 보호대상이 된다. 즉, 기계, 압력식기구, 전기나 열을 사용하는 기구 또는 장치를 사용하는 업무(위임입법 38호 제1조1항), 기계 등을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위험한 작업(위임입법 38호 제1조3항)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부가 적용대상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은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이 다르다. 공업부문에서는 종속관계가 없는 자영업자이지만 종속노동자에 유사한 준종속노동자와 수공업의 자영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모든 자영업자에 관해서 보험가입의무가 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우미나 일정한 공적활동을 행하는 실업자 등에 관해서 노재보험적용이 있다. 또, 가사사업자에 관해서 특별한 노재보험제도의 가입이 강제된다.

## 6. 스웨덴

사회보험법은 모든 사회보험제도를 주거보험과 노동보험으로 분류하고, 주거보험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고 노동보험은 스웨덴국내의 사업에 종사하는 유상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유상노동자라함은 피용자, 사용자, 자영업자 등이다(사회보험법 제2장 제7조). 유상노동을 행하는 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도우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임의로 국방·방제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국가인신재해보장법에서 보장된다.

## 7. 일본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이하 「노재보험」이라고 한다)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50호. 이하 「노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현직의 비상근직원을 제외함) 및 선원보험의 피보험자 및 농림수산 사업 중 5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개인경영 사업을 제외하고, 노동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 농어민을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가입제도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노재보험의 적용은 이탈리아와 미국과 같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적용의 확대방법은 스웨덴과 같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제도 속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프랑스와 일본은 사실상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노재보험의 적용방식에 있어서 노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영국과 스웨덴의 예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노재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노재보험의 재해인정범위를 주거위험까지 확대하는 경우, 현재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급부의 일부까지 노재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현재의 노재보험 보상수준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노재보험의 재해

인정범위를 업무재해 등<sup>5)</sup>으로 한정하는 경우, 주거위험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에 의존하게 되나 노재보험은 사업자의 보험료부담만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노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각국의 노재보험제도 중 일본의 제도는 노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가 그 틀에서 한국과 흡사한 면이 많아 우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일본의 제도는 상세한 내용에서 한국의 제도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일본의 노재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자세히 소개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노재보험제도에 대해서 그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적용의 전개

2차대전 전의 노동재해(이하, 노재로 통일한다)에 대한 노재부조는 제도가 비통일적이고 분산적이며, 일부 업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당시 노동재해는 법적문제로 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용자의 자혜적 온정 내지는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1911년에 「공장법」이 제정되어, 노재부조가 무과실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이후, 노동재해에 의한 부조의무를 무과실책임주의로 파악하는 입장이 지배적이 되었다.

2차대전 후에는, 1947년에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 일본의 노동보호법은 2차대전 전과는 원리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기준법 제정에 수반하여, 노동재해의 구제에 관해서도, 2차대전 전의 공장법, 노동자 재해부조법, 광업법이 폐지 또는 일부 개정되어, 노동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통합되었다. 노동기준법 제75조 이하에서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그로 인해 요양과 휴업을 필요로 하고, 장애가 남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노동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또는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소에 사용되는 자로 임금이 지불되는 자를 말한다(노동기준법제9조).

노동기준법과 동시(1947년)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하, 노재보험법으로 통일한다)이 제정되어, 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대한 급부와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을 흡수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통일적인 노재보험이 창설되었다(단, 선원과 공무원을 제외). 노재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노동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의무로 하고 있는 각종 재해보상의 실시를 보험제도로 담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기준법상의 각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노재보험법에 의한 각 보험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노재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 그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노재보험은 노동기준법에 근거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이 아니라, 노동기준법과는 별개의 노동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보험이라고 정의되었다. 노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정의한다면, 보험가

---

5) 통근은 업무의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통근재해를 업무재해에 근접한 재해로 보는 것을 필자는 찬성한다.

입자인 사용자에게 보험급부가 행해지고, 사용자는 그 보험급부로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재보험법에서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직접 보험급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재보험법 제정 시에는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제조업 기타 일정사업이 강제적용사업으로 되었다. 그 이후, 1965년 개정 시에는 전면 강제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2년 이내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의 의무로 해서(개정법 부칙 12조), 1968년의 노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상시노동자 5명 이상의 전 사업에 강제적용되게 되었다. 5명 미만의 사업소도, 1969년 개정에 의해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전면 강제적용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1972년 4월1일부터의 시행을 정한 정령에서는, 상시 5명 미만의 상업·서비스업 등은 잠정사업을 제외하고 「전면적용」이 실현되었다.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65년 개정에서 중소기업주, 1인경영자 등의 노동자 이외의 자의 특별가입제도를 창설하고, 그것을 확대한(1976년 개정) 것이다. 보험사고의 측면에서, 통근재해에도 노재보험법상의 보험급부를 인정했다(1973년 개정).

그 결과, 노재보험법의 적용의 면에서 노동자 이외의 자의 특별가입, 노동과정 외의 통근재해 보상 등의 제도가 창설되어, 전통적인 노동기준법 적용의 범위를 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노재보험은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재해인정의 범위를 통근재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책임보험적인 성격에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추가해왔다.

### Ⅲ. 적용 및 가입

일본 노재보험법의 적용 및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적용

법률상 당연히 노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적용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동적으로 노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의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강제적용사업(당연적용사업)과, 보험관계의 성립을 사업주의 의사에 위탁하고 있는 잠정임의적용사업으로 구분된다. 잠정임의적용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농업의 경우, 노동자 5명 미만의 개인경영사업으로 특정한 위험 또는 유해한 작업을 주로 행하는 사업 이외의 것, ②임업의 경우, 노동자를 상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연간 사용 총 노동자수가 300명 미만인 개인경영의 사업, ③노동자 수 5명 미만의 개인경영의 축산, 양잠 또는 수산(총 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의한 사업 또는 재해발생의 염려가 적은 특정 수면 등에서 주로 조업하는 것에 한함)의 사업이다.

잠정임의적용사업의 사업주 자신은 보험가입 의사가 없어도,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의 신청을 해야 한다. 즉, 잠정임의적용사업에 대해서는, 노재보험에 가입하는가의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와 그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사업주가 정부에 보험가입의 신청을 하고 정부의 인가가 있을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 즉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노동자로<sup>6)</sup>서 인정하는데 문제되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와 임원은, 사업주체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역이더라도,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공장장과 부장 등의 직에 있어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한하여 노동자이다. ② 형식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노동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는 노동자이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이나 전력회사의 수급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자이면, 상용, 임시고용,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는 관계없다.

노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단위로 적용된다. 즉, 각 사업별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 하에,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행하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므로, 하나의 기업에서도, 본사, 지점, 공장 등으로 나뉘어 있으면, 각각이 사업으로 취급되고, 각각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또, 노재보험의 보험관계에는 일괄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일괄에는 계속사업과 유기사업으로 구분된다. 계속사업이란, 공장과 광산과 같이, 한번 사업을 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구적인 사업을 계속할 것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유기사업은, 예를 들면 토목건축사업과 벌목사업과 같이, 사업의 기간이 예정된 사업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연히 그 사업은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의 폐지 기타 특별한 소멸원인이 없는 한 보험관계가 존속하지만, 유기사업은, 사업개시 마다,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계속사업의 일괄은 국내의 사업(영업소) 등을 망라할 목적이며, 청부사업은 현장의 노재보험관계를 일원화해서 전원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또, 일괄유기사업에서는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현장 작업을 연도별로 묶어서 정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사업과 거의 동일한 취급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보험료 징수를 위한 조치이며, 보험금부와는 관계가 없다.

한편,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84호. 이하 「징수법」이라고 한다)은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징수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노재보험(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고용보험법)을 합쳐서 노동보험으로 일원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보험의 적용사업에는 일원적용사업(一元適用事業)과 이원적용사업(二元適用事業)이 있으며, 가입절차가 다르다. 일원적용사업이란,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와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를 하나의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로 취급해서 노동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을 양보험에 관해서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의 이원적용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즉,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고용보험과 노재보험의 일원화를 꾀하고 있으나 직원의 이동이 심한 건설업 등은 개별 노동자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원적용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원적용사업이란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와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관계를 별개의 2개의 사업으로 취급해서, 노동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은 각각 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이원적용사업은 ①도도부현 및 시정촌(市町村)이 행하는 사업, ②도도부현에 준하는 것 및 시정촌에 준하는 것이 행하는 사업, ③항만운송의 사업, ④농림수산의 사업(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

6) 노재보험에서는 신문배달원 또는 신문배달에 종사하는 학생도 임금의 지불형태가 하청형태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종업원이 사업주를 위해서 동 학생을 지휘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 취급된다. 즉, 임금의 지불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업주와 종속관계에 있는가가 중시된다(勞災保險法解釋總覽(勞動基準局),pp.57-88).

이나 식물의 재배, 채취 혹은 벌목의 사업 기타 농림의 사업, 동물의 사육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혹은 양식의 사업 기타 축산, 양잠 또는 수산의 사업), ⑤건설사업이다. 가입절차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제출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1> 가입절차의 제출처, 서류 등

구 분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기한
일원적용사업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산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이원적용사업	노재보험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고용보험은 관할 공공직업안정소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산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자료: 각종자료에 의해 작성.

노동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한다. 그리고, 그 연도분의 노동보험료(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그 연도 말일까지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총액의 예상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로서 신고·납부한다. 보험료의 납부장소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대리점 또는 세입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다. 이러한 노동보험료는 다음연도 초에 확정된 임금총액에 근거해서 산정한 보험료액을 확정신고해서 정산한다. 노동보험료는 매년 4월1일부터 5월2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납부한 전년도에 개산 납부보험료의 확정 정산과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를 동시에 행하도록 되어 있다.

## 2. 계속사업의 가입절차

### (1) 신규가입

#### 1) 강제적용사업(당연 적용사업)

강제적용사업에 대해서는, 보험관계는, 징수법 제3조에 근거하여, 그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징수법 제4조2 제1항에 근거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이하 「감독서」라고 한다) 등에 제출하여, 노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기준 감독서에서 그 성립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통에 「노동보험 관계번호」 등을 기입한 보험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어 사업주에게 교부한다.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 신고 후에,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부해야 한다.

#### 2) 잠정임의적용사업

잠정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관할 노동기준국장에



게 가입신청을 하고, 그것에 관해서 승낙이 있는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험가입의 신청 절차는, 양식 제1호 「임의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의 기재에서는, 「사업의 개요」란을 특히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물의 사육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동물의 종류, 숫자 등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이 신청서의 제출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가입의 승낙이 있고, 관할 노동기준국장으로부터 그 사업주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보험관계의 성립년월일, 노동보험 번호를 통지받는다. 이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 성립년월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서를 첨부하여 납부해야 한다.

## (2) 일괄취급

최근에는 임금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관장자인 정부도 그 사무의 합리화,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에서, 일정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근거하여, 수 개의 특정사업(「지정사업」이라고 함)을 일괄해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소에 사업을 경영하고 그 중 하나의 사업에서 사무의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서 다른 사업분도 일괄로 하여, 지정사업에서 보험관계의 제 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사무의 합리화,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일괄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① 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이 계속사업일 것(잠정임의적용사업 강제적용사업의 구분은 관계없음), ③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일원적용사업으로, 노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 ㉡ 이원적용사업으로,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 ㉢ 이원적용사업으로, 고용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사업, ④ 각각의 사업이 보험료율표에 의한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이다. 또한, 일괄취급의 승인 기준으로는, 지정사업이 노재보험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사무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종래부터 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 등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일괄 취급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양식 제5호 「계속 사업 일괄인가·추가·취소 신청서」 3통을, 일괄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의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지정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관할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괄 취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노동기준국장은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계속사업의 일괄취급 승인서」 또는 「계속사업의 일괄취급 불승인 통지서」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지한다. 또한, 일괄취급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또 새로운 사업을 일괄취급에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해야 할 사업이 강제적용사업일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또한, 잠정임의적용사업일 때에는 임의가입신청서에, 일괄취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부기하여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정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일괄취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일괄취급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주가 그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지정사업의 변경 등의 신청을 한 때에, 또는 정부가 직권으로 승인의 취소, 변경, 지정사업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괄취급을 받게 된 경우의 보험금부의 사무는, 피재노동자가 소속하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이루어지며, 지정사업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일괄은 보험료징수를 위한 제도이다.

### 3. 유기(有期)사업

건설업, 임업은 원칙적으로 유기사업이다. 어업은 유기사업만은 아니지만, 일반의 공장, 광산 등과 달리, 적용상 특수한 사항이 많다.

#### (1) 건설업

##### 1) 대상이 되는 사업

노재보험에서 말하는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공작물의 건설, 개조, 보존, 수리, 변경, 파괴 또는 해체 또는 그 준비의 사업」이다. 한 사람이라도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건설사업(법률상에서는 공사를 「사업」이라고 함)은, 그것이 대신 등록, 지사등록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소기업의 구별이 없고, 또 사업 규모의 대소, 청부의 유무 또는 공사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각각의 공사가 모두 노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이 된다.

##### 2) 적용 단위

건설업에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정 장소에서 상호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체」를 적용단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사업은, 청부계약에 의해 영위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로 청부계약별로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된다. 이상과 같이, 건설사업은 공사별로 유기사업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각 공사별로 보험가입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업주에게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둘 이상의 유기사업(공사)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유기사업일괄」이 있다.

##### 3) 보험가입 의무자

###### ① 청부의 경우

노재보험의 보험가입자 의무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수차의 청부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청인만이 그 사업주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수차의 청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주문자로부터 직접 토목건축의 공사를 청부받은 자가,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하청하거나, 또는 그 하청인이 수청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청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인 청부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리킨다. 여기서 원청인이란 공사의 시공을 주문자로부터 직접 청부받은 자를 말하며, 스스로 실제로 그 공사를 시공하는가의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원래, 원청인은 노동기준법에 의해서, 하청노동자의 업무상 상병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노재보험에서, 원청인의 의무를 이어 받아, 원청인이 자신이 노동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공사의 부분만이 아니라, 하청인에게 청부한 공사의 부분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것을 하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청인이 노동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공사가 원청인이 청부받은 공사이면, 원칙적으로 스스로 보험가입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고, 원청인에 대하여 성립한 보험관계에 의해 포괄적으로 노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② 하청인이 사업주가 되는 경우

상기에서, 수차의 청부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청인임을 서술했는데, 이는 하청인에게는 재력과 사무능력이 부족한 자가 많기 때문에, 재해보상 능력의 관점에서 만일을 대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원청인이 재력과 사무능력이 있는 하청인에게 하청한 경우에도, 원청인만을 이 보험의 사업주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하청인을 노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로 하는 편이 재해방지 등에 도움이 되며 합리적이다. 따라서, 노재보험에서는, 하청인이 청부한 공사의 개산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만엔 이상 또는 청부금액이 1억 9,000만엔 이상이며, 원청인과 하청인의 공동신청(「하청인을 사업주로 하는 인가신청서」를 제출)에 의해 노동기준국장이 이를 승인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청인이라도 노재보험의 사업주 즉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③ 청부에 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이 경우에는, 본래의 사업주가 보험의 권리 의무를 지는 보험가입자가 된다. 예를 들면, 토목건축회사가 하청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도도부현과 시구동(市區洞)이 직영으로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토목건축회사, 도도부현 또는 시구동이 사업주에 해당하게 된다.

## 4)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차

토목, 건축 등의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강제적용사업이 되어, 그 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자연히 성립하므로, 사업주는, 그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양식 제1호)3통을 작성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립 신고가 제출되면, 감독서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그 중 1통에 「보험관계 성립기호번호」를 기입한 보험관계 성립 도장을 찍어,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 (2) 임업

#### 1) 대상이 되는 사업

노재보험에서 말하는 임업이란, 입목의 벌목, 조림, 목탄 또는 신탄을 생산하는 사업 기타 임업이다. 다시 말하면, 입목의 벌목, 조림 또는 운재 사업은 물론, 운재에 부수되는 임도, 목마도의 건설, 임야 등에서 행하는 신탄의 제조, 목탄의 제조 및 여기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반출사업, 식목, 조림, 땅 갈기 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이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규모의 대소, 청부의 유무, 또는 작업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두 노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이 된다. 단, 이러한 사업이라도, 노동자를 상시 사용하지 않고, 또 연간 사용 연 노동자수가 300명 미만의 개인경영의 임업의 경우에는 잠정임의적용사업이 된다.

#### 2) 적용 단위

임업의 내용을 이루는 벌목, 재목의 운반, 식목, 잡초제거 등의 작업은, 특정의 산 또는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므로, 임업은 대체로 유기사업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현장별로 하나의 사업이며, 적용단위가 된다. 단, 건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벌목 사업을 잇달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벌목사업을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취급하게 된다.

### 3) 보험가입 의무자

임업에서는 사업주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산주가 직접 노동자를 사용하여 입목의 벌목, 조림, 식목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재업자, 제탄업자 등이 산림을 사서, 그 업자가 직접 노동자를 사용하여 입목의 벌목, 조림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식목사업에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노동자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단, 그 중에는 식목업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식목을 청부받아, 직접 노동자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는, 식목주문자와 식목업자와의 관계가 순수한 청부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식목업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도도부현과 시구동 등의 지방공공단체가 직영으로 하는 입목의 벌목, 조림, 식목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 공공단체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 4)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차

임업관계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 사업의 대부분이 강제적용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요령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경우와 같다. 또한 그 사업이 우연이 잠정임의적용사업이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희망한 때에는, 보험가입의 신청을 해야 한다.

### (3) 어업

어업은 본래 계속사업이나, 일반적인 계속사업과 다른 점이 많다.

#### 1) 대상이 되는 사업

노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포하거나 양식을 하는 사업 중, 특히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 직영에 의한 어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란, 원칙적으로 총 톤수 5톤이상의 선박에 승선하는 선장, 해원 및 예비선원을 말한다. 단, 이 중에서 총톤수 30톤미만의 어선의 일부 및 호수, 강 또는 항구만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선원법의 적용이 없다. 노재보험의 강제적용사업이 되는 어업은, 「총톤수 7) 5톤이상의 어선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채포사업(하천, 호수, 늪 기타 재해 발생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수면에서 주로 조업하는 사업을 제외함)」에 한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업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이지만,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므로, 일정한 어업시기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강제적용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선」이란, 오로지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잠정임의적용사업이 되는 어업은, 적용 대상사업 중, 강제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다. ①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개인 경영 수산업으로, 총 톤수 5톤미만의 어선으로 이루어지는 어업, ② 하천, 호수, 늪, 기타 지정 수면의 지역에서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 2) 적용 단위

---

7) 「총 톤수」란, 선박 둘레의 안쪽 용적을 입방미터로 표시한 총적량을 톤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어업에 대하여 적용단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는, 각각의 어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일체를 1사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어망업은, 통상 모선인 망선을 모체로, 등선·심색선·운반선 등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어업이 행해지는데, 이 경우는, 이 통합 중에 1척이라도 20톤 이상의 동력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통합 작업 전부가 선원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매년 통합 어선 전부가 어망을 2개월 이상 쉬고, 일부의 배가 정치망과 개조(介藻)류의 채취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정치망과 개조류의 채취에 종사하는 배만이 그 기간 노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3) 보험가입 의무자

노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업주 즉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의한 어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망원(網元)으로 불리우는데, 이 망원이 보험가입자가 된다. 망원은 언제나 단독으로 사업주로서 존재한다고는 한정할 수 없고, 실제로는 망원과 선주가 동일인인 경우도 있고, 망원은 자신의 사용선을 가지지 않고 선주로부터 사용선을 빌려서 영업하는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이 되거나, 또는 선주와 선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이 있어서, 현실적인 노동관계는 복잡한 때가 많기 때문에, 노재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어업을 영위하는 망원이 가입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드시 망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선주가 스스로 선장이 되어 노동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수도 있으나, 이러한 때에는, 그 선주가 가입의무자가 된다.

### 4) 사업을 시작할 때의 절차

어업에 대해서는 적용단위와 보험가입 의무자 등에 대하여 문제가 많고, 계속사업으로서는 특수한 것이지만, 어업에서 유기사업은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가입절차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사업과 같다.

## 4. 유기사업의 일괄취급

소규모의 건설업 및 임업의 일괄취급은,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둘 이상의 소규모 유기사업을 동일 사업주가 행할 때에는, 이것을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일괄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취급된다.

### (1) 일괄취급의 요건

유기사업의 일괄취급은, 둘 이상의 유기사업이 다음 요건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① 사업주가 동일인인 경우이다. 건설업에 속하는 사업이 수차의 청부에 의해 이루어진 때에는, 원청인에게 한정되어, 하청 사업은 일괄취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각각의 사업이 유기사업인 경우이다. ③ 각각의 사업이 강제적용사업이고, 건설업 또는 별목사업에 속하는 경우이다. ④ 각각의 사업규모가, 개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개산보험료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가 160만엔 미만이고, 또한 건설업에서, 청부금액이 1억9,000만엔 미만, 별목사업에서 소재의 예상 생산량이 1,000입방미터 미만인 경우이다. ⑤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즉, 둘 이상의 사업이 시기적으로 다소라도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이다. ⑥ 건설업에서는, 각각의 사업이 보험료율표에 의한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이다. ⑦ 각각의 사업에 관련된 보험료의 납부 사무가, 한 개의 사무소에서 취급되는 경우이다. ⑧ 각각의 사업이, ⑦의 사무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또는 이와 인접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각각의 사업이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일괄로 되어, 전체가 한 개의 사업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당초에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건설업 또는 별목사업을 업으로 하여,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취급되게 된다.

## (2) 절차

유기사업의 일괄 취급의 경우는,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일괄취급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신청절차가 없다. 그러나, 일괄취급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할 필요가 있다.

① 매년도 당초에, 그 연도 중에 예상되는 모든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한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고, 납부한다(계속사업의 경우의 절차와 같다). ② 매월 10일까지, 전월중에 개시한 사업에 대하여, 고시 양식 제3호의 「일괄 유기사업 개시 신고」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도말에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연도중에 실제로 행한 전 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을 기재한 「일괄 유기사업 보고서」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한다. 단, 보험연도의 말일에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차년도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대상이 되므로, 3월31일 현재로 공사 또는 별목이 종료하지 않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괄취급된 사업에 관련된 보험금부 사무는, 일괄된 사업에 관련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취급한다. 기타에 대해서는, 일반 계속사업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

## 5. 적용확대

적용확대를 위해서, 전술한 일원적용과 일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1) 노동보험사무조합

#### 1) 업무내용

노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보험가입절차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사무절차가 있으나, 소규모사업주로서는 사무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모든 사업에 노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에는, 각 사업주의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면서, 보험자인 정부의 사무량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가 행해야 할 이들 사무를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 정부가 인가한 사업주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노동보험사무조합은 대개가 상공회의소, 사업협동조합, 기타사업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다.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주요 업무는, 각각의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료의 납부와 보고 등의 절차 등에 대해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행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장부를 정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이것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만

약 노동보험사무조합의 태만으로 보험료의 납부가 늦어진 때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보험금부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있는 때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근거한 경우는, 그 부정 수급액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변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노동보험사무조합은 상당한 책임을 가진 대리인이며, 보험자 측인 노동기준국장과 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납입 고지, 독촉 기타의 통지 등은, 일일이 사업주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의 납입상황이 양호한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해서는, 보험료 액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2) 대상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비롯하여, 각 종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는, 단체 구성원인 사업주 또는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노동보험사무조합으로서 보험료의 납부 기타 노동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종류와 법인인가의 구분을 묻지 않으나, 법인이 아닌 자는, 규약 등에서 대표자를 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단체이면, 대부분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동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노동보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업종의 사업주라도 상관없지만, 그 사용하는 노동자 수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숫자 미만의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후생노동성령(징수법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시 300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다. 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상시 50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시 100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한정한다.

## 3) 인가신청 등

이원적용사업의 노재보험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가, 노동보험사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의 주요 사무소를 관할하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노동보험사무조합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하는 단체의 지구가 2 이상의 도도부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을 경유하여,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정관과 규약 등 단체의 목적, 조직, 업무, 운영 등을 명확히 한 서류, 노재보험 사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한 서류, 자산의 상황을 명확히 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노동보험사무조합의 인가는, 그 단체 또는 연합단체가, 노동보험 사무를 적정하게 행하고, 그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단 인가된 노동보험사무조합이라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와, 노동보험의 사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그 처리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기타, 새롭게 노동보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위탁이 있는 때에, 또는 해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을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동보험 사무의 처리를 폐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4) 장려금 등

후생노동성은 노동보험의 적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 절차사업의 해소를 도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7년도부터 사단법인 전국노동보험사무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노동보험의 가입촉진 업무 등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이 위탁사업은, 전국노동보험사무조합연합회의 하부조직인 사무조합협회에 2인에서 6인 배치되어 있는 노동보험 적용촉진원(전국 137명)에 관련된 경비 및 연수비 및 각 사무조합에 대한 미 절차사업에 관련된 가입권유 활동비 및 가입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장려금의 종류는 적용촉진장려금, 업무비, 연수업무비가 있다.

#### (2) 비용징수

노재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는 사업(미 절차사업)에서, 노재사고가 발생한 후, 피재노동자가 노재보험금부를 받은 경우는, 노재보험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보험금부에 상응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의 소급 징수를 하는 외에,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제2차년 분) 등에 관하여」(1987년 3월 30일자 노동성발 노징 제23호·기발제174호)에 의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부액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얻은 가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sup>8)</sup> 징수대상 사업주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 사업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이다.

제25조 제1항제1호의 비용징수의 요건인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sup>9)</sup> ①관할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이하 「관할국」이라고 한다) 또는 관할 도도부현(이하 「관할현」이라고 한다) 또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이하 「관할서」라고 한다) 또는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이하 「관할소」라고 한다)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 외에 소정의 절차를 취하도록 지도(미 절차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부르는 방법 등에 의해 직원이 직접 지도하는 것에 한하여, 가입권장용의 문서와 전화에 의한 가입권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당면 10일간으로 한다)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관할국 또는 관할현 및 관할서 및 관할소에서는, 직원이 미 절차사업주에 대하여 가입권장에 관련된 지도를 한 경우에는, 미 절차사업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소재지 및 지도경과(예를 들면, 지도 일자, 담당자의 직·성명, 상대방의 직·성명, 지도의 내용 등)외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용 노동자 수, 노재보험만 미 절차인 경우는 당해 사업의 노동보험번호를 기록해 둔다. ②과거에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 외에 소정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후에 개시한 당해 사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③복수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그 중 한가지 사업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 외에 소정의

8) 총무청이 조사한 18노동기준국에서 1995년도부터 9년 간에 발생한 미 절차사업의 노동자에 대한 수급결정사안 1,418건(금부총액 약 40억3,000만엔) 중,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것은 69건(4.9%. 징수총액 약 1,800만엔)이다.

9)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법 및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제2차분) 등에 대하여」(1987년 3월30일자 노동성발 노징제23호·기발 제174호 노동대신관방장·노동기준국장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도도부현 지사 앞. 개정: 1993년6월22일자 노동성발 노징 제42호·노기발 404호).



절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노재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정수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험금부는,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기한(보험관계 성립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다음날부터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이 있던 날의 전날(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에 앞서서 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한 정수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있던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생긴 사고에 관련된 보험금부(요양보상금부 및 요양금부를 제외함) 중에서 사고발생일로부터 노재보험에 관련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제출이 있던 날의 전날 또는 정수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던 날의 전날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지급시마다 행한다. 단, 이 경우, 요양을 개시한 날(즉사의 경우는 사고발생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연금금부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지급사유가 생기고, 또 이 기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부에 한정한다). ②정수금의 가액은, ①의 보험금부액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얻은 가액으로 한다.

### (3) 직권적용

노재보험에 대한 가입권유는, 노동보험사무조합협회의 가입 권유활동에 맡겨져 있다. 후생노동성은, 반복적인 적용 촉진활동에 의해서도 가입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직권에 의해 성립절차를 하도록 노동기준국을 지도하고 있다.

## IV. 특별가입

특별가입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

사업주, 자영업주, 가족종업원 등 노동자 이외의 자는, 본래는 노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자 중에는, 그 업무와 통근의 실태, 또는 재해의 발생상황으로 보아 노동자로 준하여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데 적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재보험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재보험의 이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특별가입제도이다. 특별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주

중소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이 다음 표와 같은 일정규모 이하이고, 그 사업의 보험사무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주일 것이 조건이다.

<표 2>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규모

업 종	노동자 수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소매업	50명
서비스업/도매업	100명
상기 이외의 업종	300명

자료: 노재보험법에 근거하여 필자 작성.

계속하여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1년간에 100일 이상에 걸쳐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2) 중소기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1)의 중소기업주의 사업에 종사하는 가족종업원이나, 법인인 경우의 대표자 이외의 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1인경영 자영업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일의 위험정도, 업무와 사생활과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는가의 여부(업무상인가 아닌가의 판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다음의 자에 한하여 특별가입이 인정된다.

①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 사업을 하는 자 즉, 개인 택시업자와 자동차에 의한 개인화물운송업자가 해당한다. ② 토목, 건설사업을 하는 자이다. 목수, 미장이, 석공 등 소위 1인경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③ 어선에 의한 어업을 행하는 자이다. 어선을 타고 작업을 행하는 자영업자에 한정한다. ④ 임업사업을 하는 자이다. 식목, 벌목, 목탄제조 등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⑤ 의약품의 배치판매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각 가정에 상비약 등의 의약품을 배치·판매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⑥ 재생이용이 되는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선별, 해체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1인경영 기타의 자영업자로서 특별가입할 수 있는 것은, 상기의 사업을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가끔씩 노동자를 사용하는 때가 있더라도 지장은 없지만, 1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는, 노재보험의 적용사업에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하여 가입하면, 전술한 중소기업주로서 특별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이더라도, 이름만으로 자기 자신이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는 특별가입할 수 없다. 제도의 취지로 보아, 노동자와 같은 상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일 것이 필요하다.

한편, 1인경영 자영업자조합은 중소기업복지사업단 산하단체로서 노동기준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다. 그 후 운수사업1인경영자영업조합이 설립되어 건설업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1인경영 자영업자가 가입해 있다. 이러한 1인경영 자영업자는 기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노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1인경영자 영업자조합을 적용사업주, 조합에 가입한 1인경영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간주해서,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4) 1인경영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의 1인경영 기타의 자영업자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사업에 상시로 종사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족 종업원이 이에 해당한다.

#### (5) 특정작업종사자

중도의 장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다음의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 1) 특정농작업 종사자

특정농작업 종사자로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연간 농업생산물 판매액 300만엔 이상 또는 경영경지면적 2헥타아르 이상의 농업(축산 및 양잠을 포함)의 사업장에서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 또는 축산(가축 및 벌을 포함) 또는 누에의 사육작업(이하 「경작 등 작업」이라고 말한다)으로, 다음의 한가지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①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경작 등 작업이다. ②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의 작업이다. 또한 40도 이상의 경사지에 대해서는, 수평면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이면, 그 장소의 경작 등 작업도 대상으로 된다. ③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별표 제6제7호의 산소결핍위험장소의 경작 등 작업. ④ 농약 살포 작업이다. 「농약」이란, 농약단속법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약제로,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⑤ 소, 말, 돼지에 접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작업. 또한 조교는 경작 등 작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지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

농업에 대해서는, 그 업태가 특수하고, 고용노동도 부분적으로 있으며, 또한 그 재해발생상황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도의 장해가 생길 위험이 가장 높은 종류의 기계로 지정되어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농작업종사자만이 특별 가입된다.

##### 3) 직장적응훈련수강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는 실업자 등 구직자가 직장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 또한 취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관계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게 특별가입의 길을 열어준다. 또, 사업내 직업훈련을 받는 자는 고용관계도 있고, 임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노재보험의 보호대상이 된다.

##### 4) 가내노동자

가내노동법에서 정하는 가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에 대해서는, 작업장소가 통상 가정내이며, 그 재해에 대하여 업무기인성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위험유해성이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특별가입할 수 있다.

##### 5)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조합(이와 비슷한 국가공무원의 직원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하 「노동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상근임원은, 중소기업주로서 특별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에 대해서도, 거의 노동자인 전업직원(노동조합 등이 고용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과 같은 실태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준하여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재보험에

특별가입하는 길을 열었다. 노동조합 등의 상근 임원으로 특별가입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집회장소 또는 도로, 공원 기타의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집회의 운영작업, 단체교섭 작업, 기타 당해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련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 6) 개호작업 종사자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의 개선 등에 관한 법률(1992년 법률 제63호)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호관계 업무에 관한 작업으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의 일상생활상의 시중, 기능훈련 또는 간호에 관련된 것을 행하는 자는 특별 가입할 수 있다.

#### (6) 해외파견자

일본국내의 기업에서 해외의 사업 등으로 파견되는 자 중, 다음의 자에 한하여, 특별가입할 수 있다. ①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사업을 하는 단체로부터 개발도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된 자. ②일본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서 해외의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되는 자, ③일본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에서 해외로 300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또는 소매업에서는 50명,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에서는 100명)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기타 노동자 이외의 자로 파견되는 자.

①의 「개발도상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하는 단체」로는, 국제협력사업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외의 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외의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술협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험료납부 등의 실무를 행할 능력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국내의 단체 또는 사업주가 하는 사업(이하「파견한 곳의 사업」이라고 한다)이 「사업의 기간이 예정된 사업(유기사업)」일 때에는, 거기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자는 특별 가입할 수 없다. 파견되어 해외에서 종사하는 사업(이하「파견된 곳의 사업」이라고 한다)의 종류, 형태 등은 관계없다. 즉, 파견된 곳이 해외지점, 합병사업, 현지법인 등은 일체 관계없다. 또한 파견된 곳의 사업이 소재하는 국가 중, 이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는 국가를 후생노동성령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적용 제외되는 국가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또, 파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근, 재적출향, 이적출향 등 파견의 형태에는 관계없고, 파견한 곳의 사업의 사업주의 명령으로 해외의 파견된 곳의 사업에 종사하고, 그 파견된 곳의 사업과의 사이에 현실적인 노동관계를 가진 한 특별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진다.

해외출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파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출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본의 노재보험이 적용되고, 노동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출장자는 당연히 노재보험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서, 해외출장자가 되는가, 해외파견자로 특별가입해야 하는가는, ① 노동의 장소가 단순히 해외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가, ② 해외사업장에 소속하여 그 사업장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가 라는 점에서,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파견되는 자」란, 새로 파견되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해외 사업에 파견되어 있는 자도, 특별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된 곳 사업의 대표자(예를 들면 현지법인의 사장)로서 파견되는 자 등은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유학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자는, 「해외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파견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특별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가입절차

1인경영자, 기타 자영업자 등의 단체가 특별가입에 의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단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어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새롭게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중소기업주 등에 자가 특별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보험관계가 성립할 것과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노동보험사무조합에 위탁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①중소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관할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특별가입신청서(양식 제34호의 7)를 제출한다. ②동일한 중소기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의 사업주로 되어 있는 경우, 전기한 특별가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때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희망하는 업종별로 특별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 ③중소사업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가입의 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종사자 등 노동자 이외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전원을 포괄하여 특별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④특별가입의 신청을 할 때에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이력 및 희망하는 급부기초일액 등을 신청서 별지에 기입하고,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해서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⑤특별가입신청에 대한 노동기준국장의 승인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범위 내에서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이미 특별가입을 승인받은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이미 특별가입을 승인받은 자로 성명, 작업내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에 관한 변경신고」(양식 제34호의8)을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②이미 특별가입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새롭게 사업주가 된 자 또는 새롭게 사업에 종사하게 된 자가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립해 있는 보험관계를 기초로 하여 특별가입 절차를 하기 때문에, 신청서가 아닌 변경신고를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해 사업의 일부의 사람이 특별가입자로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가입의 변경신고에 대한 노동기준국장의 변경결정은, 당해 신청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의 범위에서 특별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날이 된다.

특별가입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는데, 이 탈퇴신청은, 중소기업주와 노동자 이외의 자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 전원을 포괄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장에 대하여 「특별가입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주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가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또,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①중소사업주 등의 특별가입은, 그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성립해 있는 보험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소멸일에 특별가입자의 지위도 소멸한다. ②중소사업주가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소멸한다. ③노동보험사무조합에 노동보험의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주가 위탁을 해제한 경우는, 그 해제일에 특별가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한다.

### 3. 특별가입시의 건강진단

#### (1) 건강진단

특별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주 중, 다음 표에 기재되어 있는 「특별가입 예정자의 업무 종류」란에 따라, 각각의 종사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입의 신청시에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표 3> 건강진단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

특별가입 예정자의 업무의 종류	특별가입 전에 좌란 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통산기간)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3년	진폐 건강진단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1년	진동장해 건강진단
납 업무	6개월	납중독 건강진단
유기용제업무	6개월	유기용제 중독 건강진단

자료: 후생노동성.

#### (2) 건강진단의 절차

건강진단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특별가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주 등으로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보험사무조합을 통하여, 처음에 「특별가입시 건강진단 신청서」(특진양식 제7호)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신청서의 업무이력에서 판단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장으로부터 「특별가입 건강진단 지시서」 및 「특별가입 시 건강진단 실시의뢰서」가 교부된다. 가입시 건강진단 대상자는, 지시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지시된 진단 실시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진시에는 의뢰서를 당해 진단 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의 건강진단에 요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데, 수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는 자기부담이 된다. ③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당해 진단실시기관이 작성한 「건강진단 증명서」(특별가입자용)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한다. 진폐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엑스선 사진을 건강진단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신청서는, 신청서와 동시에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수진 후, 신속하게 건강진단 증명서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이미 특별가입을 승인받은 사업에서, 새롭게 사업주가 된 자 또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자 중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는, 신청서를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하여, 지시서 및 의뢰서가 교부된 뒤에, 건강진단을 수진하고, 변경신고에 그 건강진단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의 내용, 업무이력 등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가입 신청을 해도 승인되지 않거나,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3) 특별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가입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가입이 제한된다. ①특별가입예정자가 이미 질병에 걸려 있어, 그 증상 또는 장해정도가 일반적으로 취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요양에 전념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내용에 관계없이 특별가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특별가입 예정자가 이미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증상 또는 장해 정도가 당해 업무로부터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만 특별가입이 인정된다.

## 4. 급부기초일액 및 보험료

### (1) 급부기초일액

특별가입을 하는 자의 급부기초일액은 소득수준에 맞게 적당한 액수를 신청하고, 노동기준국장이 승인한 액수가 급부기초일액이 된다. 또한 결정된 급부기초일액은, 매년 4월1일부터 5월20일 까지의 사이에 「보험료 신고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급부기초일액의 변경은, 「급부기초일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의 사이에 절차를 해야 한다.

<표 4> 급부기초일액 · 보험료

급부기초일액 A	보험료산정기초액 B=A×365일	연간보험료 연간보험료=보험료산정기초액×보험료율 (사례) 건설사업(기설 건축물 설비공사사업의 경우 보험료율 15/1,000
20,000엔	7,300,000엔	109,500엔
18,000엔	6,570,000엔	98,550엔
16,000엔	5,840,000엔	87,600엔
14,000엔	5,110,000엔	76,650엔
12,000엔	4,380,000엔	65,700엔
10,000엔	3,650,000엔	54,750엔
9,000엔	3,285,000엔	49,275엔
8,000엔	2,920,000엔	43,800엔
7,000엔	2,555,000엔	38,325엔
6,000엔	2,190,000엔	32,850엔
5,000엔	1,825,000엔	27,375엔
4,000엔	1,460,000엔	21,900엔
3,500엔	1,277,500엔	19,155엔

자료: 노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의20에 의해서 작성.

## (2) 보험료

특별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기초액(급부기초일액에 365를 곱한 것)에 각각의 사업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된다. 또한, 연도 도중에서, 새롭게 특별가입자가 된 경우와 특별가입자가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내에 특별가입 월수(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1개월로 한다)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초액에 의해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 5. 재해인정

특별가입자 중, 특정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재해에 대해서만 노재보험에 의한 보호가 주어진다. 또한 2차건강진단 등 급부에 대해서는, 제도상 적용이 없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업무재해

특별가입자의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은, 적용상법의 노동자와 달리, 노동계약에 근거한 타인의 지휘명령에 의해 타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자신의 판단에 의한 소위 주관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 또는 작업의 범위를 확정함은 통상 곤란하다. 따라서, 특별가입자에 대한 업무이외의 인정은,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노재칙 제46조의26),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기인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여 행하며, 업무와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특별가입제도의 취지는 그 업무의 실정, 재해의 발생상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동기준



법의 적용노동자에 준하여 보호하기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노재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가입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재해로 보호되는 경우의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노동자가 행하는 업무에 준한 업무의 범위이며, 특별가입자가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보호를 해 주려는 취지는 아니다.

a. 특별가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① 중소기업주 등(법 제33조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

가. 특별가입신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7) 별지의 업무내용란에 기재된 소정 노동시간(휴식시간을 포함. 이하 동일)내 에서, 특별가입의 신청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하는 행위(당해 행위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업주 본래의 업무를 제외) 및 이에 직접 부대되는 행위(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위, 준비·마무리행위,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노동자가 시간외노동에 응하여 취업하는 경우

다. 취업시간(시간외노동을 포함. 이하 동일)에 접속하여 행해지는 준비·마무리업무를 특별가입자만 행하는 경우

라. 전기 가, 나 및 다의 취업시간 내 에서 사업장 시설의 이용 및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동 중인 경우. 이 경우에서 일상생활의 용무에 제공되는 시설과 사업용의 시설과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포괄하여 사업장시설로 간주한다.

마. 당해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업무(사업주의 입장에서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제외)를 위해 출장하는 경우

바. 통근도중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 사업주 제공에 관련한 노동자의 통근전용 교통기관의 이용 중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사. 당해 사업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운동경기회, 기타의 행사에 대하여 노동자(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자)를 동반하여 출석하는 경우

② 1인 경영 등(법 제33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

가. 건설업의 1인 경영 등

- 청부계약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 청부공사현장에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청부계약에 근거하는 것이 명백한 작업을 자택 내 작업장에서 하는 경우
- 청부공사에 관련된 기계 및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공구류 <톱, 브러쉬기, 솔 등>를 휴대하고 통근하는 경우를 제외)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출근 도중

나. 개인택시 영업자 및 개인화물운송업자

- 면허를 받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작업(운전보조작업을 포함), 화물의 신고 내리는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태풍, 화재 등)에 의한 예정 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다. 어선에 의한 자영어업자

- 수산동식물의 채취, 이에 직접 필요한 용선중의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최종 출발지로부터 어선까지, 또는 어선에서 최초의 도착지까지의 사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 돌발사고에 의한 예정외의 긴급한 출근도중

다. 임업의 1인경영 등

- 임업중의 작업지, 목재의 반출을 위한 작업로 및 이에 접속하는 토장(土場)에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위, 준비·마무리행위,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 이하 동일)를 하는 경우
- 작업을 위한 준비·마무리, 기계 등의 보관, 작업의 사전협의 등을 통상하는 장소(자택을 제외한다. 이하「집합 해산장소」)에서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집합 해산장소와 삼림 안의 작업지 사이의 이동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 작업에 사용하는 대형 기계 등을 운반하는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용무를 위해 작업지 또는 집합 해산장소를 향하는 행위

라. 의약품의 배치 판매의 사업을 하는 1인경영 등

업무수행성은, 주거를 출발한 다음의 최초의 용무처에서 그 날의 최후의 용무처까지의 사이에서 행하는 의약품의 배치 판매업무(의약품의 매입을 포함. 이하 동일)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 경우의 의약품의 배치 판매업무는 약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1961년 후생성령 제1호)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한 배치 판매에 종사하는 구역 및 기간 내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재생자원 취급업의 1인 경영

-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 선별 또는 해체하는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생리적 행위, 반사적 행위, 준비·마무리행위, 필요행위, 합리적 행위 및 긴급업무행위)
- 재생자원을 수집, 운반하기 위해 행하는 트럭 등의 화물운반용 차량 등을 운전 또는 조작하는 작업 및 직접 부수되는 행위
- 태풍, 화재 등의 돌발사고로 인한 긴급 용무를 위해서, 재생자원의 집적장소로 향하는 행위

③ 특정작업종사자(법제33조 제5호 해당자)

가. 특정농작업 종사자

- 자연농업자가, 농작업장에서,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토지의 경작 또는 개간, 식물의 재배 또는 채취 또는 가축(벌을 포함) 또는 양봉작업(이하「경작 등 작업」이라고 한다)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예를 들어, 경작 등 작업 중 또는 경작 등 작업의 전후에 행하는 경작 등 작업을 위한 동력기계의 점검·수리작업 등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농산물을 공동 집하시설까지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집하작업(출하작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 동력기계를 포장(圃場) 상호간에서 운전 또는 운반하는 작업, 모·농약·비료 등을 공동육모시설 등과 포장과의 사이에 트럭 등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만, 예를 들면, 노동자를 포장까지 마이크로버스 등으로 수송하는 작업, 농산물을 시장까지 트럭 등으로 출하하는 작업, 축사·농사의 건축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농작업장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40도 이상의 경사지에서, 수평면에서 2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서, 경작 등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농작업장의 산소결핍 위험장소(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제6제7호에 규정하는 발효창고 등)에서 경작 등 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예를 들어, 가축의 축사를 위한 사료를 발효·저장 또는 토지경작을 위한 퇴비의 발효·저장이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 농작업장에서 농약(농약단속법 제1조의 2제1항에 규정하는 약제이고,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의 살포작업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농작업장에서 소·말·돼지에 접촉하고,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경작 등 작업(소·말·돼지가 없는 축사내의 청소 등의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예를 들어 가축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우리 등으로 넣는 작업이 원칙적으로 해당된다.

#### 나. 지정농산 기계작업종사자

- 자영업자가 포장, 포도의 작업장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지정농업기계)를 써서 행하는 작업(인접하는 타인의 포장, 포도에서 공동작업을 포함)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 동력탈곡기 및 동력 컷터를 써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포장, 포도 이외의 작업장에서 행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행하는 작업에는, 타인의 포장 등에서 지정농업기계를 써서 행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 당해 기계를 포장 등의 작업장과 격납장소 사이에서, 운전 또는 운반하는 작업(모, 방제용약, 퇴비 등을 공동육묘시설 등에서 포장 등의 작업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포함) 및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

#### 다. 직장적응훈련생

노동자의 경우에 준한다.

#### 라. 가내 노동자 등

가내 노동자 등이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특별가입신청서(고시양식 제34호의 10(별지)의 「업무 또는 작업의 내용」란에 기재된 작업 또는 이에 직접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또한, 「직접 부수되는 행위」란,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서 행하는 당해 작업의 준비, 마무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택과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과의 사이, 자택 또는 자택 이외의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과 위탁자의 사무소 사이의 왕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당해 가내노동자 등의 작업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행하는 재료, 가공품 등의 적재, 신고 내림 및 운반작업은 직접 부수되는 행위가 된다.

#### ⑤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

노동조합 등의 상근임원이, 당해 노동조합 등의 사무소, 사업장, 집회장 또는 도로, 공원 기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집회의 운영, 단체교섭 기타 당해 노동조합 등의 활동에 관련된 작업(당해작업에 필요한 이동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경우.

#### ⑥ 개호작업 종사자

개호노동자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관계업무에 관련된 작업으로, 목욕, 배설, 식사

등의 개호 기타 일상생활상의 돌보기, 기능훈련 또는 간호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행위.

⑦ 해외파견자(법 제33조 제6호 및 제7호 해당자)

국내 노동자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통근재해

특별가입자의 통근재해에 대하여, 특별가입자의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의 왕복 실정 등을 고려하여, 노재보험의 보호가 주어져 있다. 단, 개인택시업자, 개인화물운송업자, 어선에 의한 어업자, 농업관계 특정작업종사자인 특정농작업종사자, 특정농업기계작업 종사자 및 가내노동자 및 그 보조자의 통근재해에 대하여는, 그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의 왕복실태가 명확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노재보험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별가입자의 통근재해의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통근재해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노재보험의 보험료에서 중소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특별가입 보험료는 기존의 노재보험 관계에 특별가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노재보험료율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1인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종특별가입 보험료는 사업별 사고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업의 종류별로 되어 있고,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종특별가입 보험료는 일본영역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의 노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노동기준 감독서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구이며, 노동보험 보험료의 징수관리가 있으나, 공공직업안정소는 도도부현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 V. 시사점

일본 노재보험적용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1. 당연적용

한국에서 임의가입으로 되어있는 건설업의 일부와 가사서비스업은 일본에서는 당연적용사업이다. 당연적용 사업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가입절차를 취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주의 미가입행위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며, 사업주와 노동보험료의 적용업무를 행하는 감독관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논리이다. 미가입사업주의 노동자에게 보험급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한국의 산재보험은 비정규직종이 적용제외되고 있으나, 일본의 노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의 의미를 실질적 관계로 해석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고 사업자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노재보험의 목표인 망라적인 노재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급부는 가입절차와 관계없이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험료징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과 노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일원적용되고, 복수의 시업을 일괄하는 일괄이 도입되고 있다.

## 2. 임의적용

일본과 한국은 노동자를 모두 노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임의적용대상에는 일본에 없는 건설업과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당연적용대상자인 건설업과 가사서비스를 임의적용으로 하면서도, 이미 해당 직종의 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공무원 등을 임의가입대상으로 해서 추가보상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의미가 불투명하다. 더욱이, 한국의 임의적용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하는 제도이나, 사업주 자신은 보험가입 의사가 없어도 당해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과반수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때에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임의적용은 잠정임의적용이기 때문에 언젠가 당연적용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특별가입

전술한 일본의 당연적용과 잠정임의적용에 의하면, 실질적인 노동자인 중소기업사업주나 1인경영자영업자는 노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도 노재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가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별가입자는 보상에 있어서도 일반가입자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농업이나 운수업 등의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를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기초급부일액도 가입시에 지정하고 위험이 높은 직종에 한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험료납부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조합을 조직하게 하고 이들 단체를 가입자로 하고 있는 점 등 보험료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특기할 만하다. 즉, 적용의 확대는 재해 인정범위와 보상체계, 보험의 재정과 연계하지 않고는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용확대를 재해인정범위 및 보상체계와 연계하지 않고 논하는 것은 장래 노재보험의 틀에 중대한 문제를 남길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總務廳行政監察局, 『勞災保險事業の新たな展開を目指して』, 大藏省印刷局, 2000年 4月.
- 原智徳, 『新訂版; 雇用保險法・労働者災害補償保險法の解説』, 一橋出版, 2001年 8月.
- 本田淳亮 外, 『窪田隼人教授還暦論文集 労働災害補償法論』, 法律文化社, 1985年 11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労災管理課, 『新訂版; 勞災保險制度の解説』, 勞務行政研究所,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勞災保險特別加入; 海外派遣者の加入から補償まで』, 三信圖書,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労災管理課, 『改訂版; 勞災保險法』, 勞務行政研究所,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改訂5版; 勞災保險法便覧』, 労働調査會,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改訂5版; 勞災保險給付の認定と實務』, 労働調査會,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改訂版; 勞災保險の給付手續便覧』, 勞務行政研究所, 2001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労災管理課, 『改訂新版; 林業・建設業の勞災保險率適用必携』, 勞務行政研究會, 2001年 11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勞災保險; 給付基礎日額算定の實務』, 勞務行政研究會, 2002年 2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監修, 『第3集; 勞災保險實務問答』, 労働調査會, 2002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2002年 勞災保險關係法令集』, 三信圖書, 2002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労災管理課, 『2002年勞災保險適用事業細目の解説』, 労働新聞社, 2002年 3月.
-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災補償部補償課, 『勞災保險の實務; 加入手續・保險料申告から給付請求まで』, 日本法令, 2002年 5月.
- 労働省労働基準局補償課, 『勞災保險精神障害等の認定と事例』, 勞務行政研究所, 2000年 3月.
- 労働省労働基準局補償課, 『勞災保險特別加入制度の解説』, 労働調査會, 2000年 3月.
- 労働省労働基準局, 『勞災保險; 業務災害及び通勤災害認定の理論と實際; 下巻』, 勞務行政研究所, 2000年 3月.